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4.1.19.(금) 조간	배포	2024.1.18.(목)		
담당 부서	조사1국 조사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승우	(02-3145-5550)
		담당자	팀 장	장정훈	(02-3145-5582)
	조사2국 조사1팀	책임자	국 장	장창호	(02-3145-5650)
		담당자	팀 장	이장준	(02-3145-5653)
	조사3국 조사1팀	책임자	국 장	임형조	(02-3145-5100)
		담당자	팀 장	장경필	(02-3145-5106)

‘무늬만’ 신규사업, 불공정거래 집중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

- 상장기업 대주주·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
 -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거래(이하 ‘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’)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행태는 주주·기업의 가치보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부양 수법 중 하나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입니다.
-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*해 왔으며,
 - * 「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」(‘23.4.27.), 「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 결과 관련 후속조치」(‘23.11.20.) 보도자료 등 참고
 - ‘23년중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(증권위 의결)하고,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.
-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년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감시하는 한편,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·조사하여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감으로써,
 - 투자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

- 주식시장에서는 매년 유망사업으로 각광 받는 ‘인기테마 주식’에 대한 투자 열기가 매우 높습니다.
 - ‘20~’21년 사이에는 코로나19 관련 사업(마스크, 진단키트, 치료제 등)이 유망 신사업으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,
 - ‘22년 이후에는 2차전지, AI, 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테마사업이 유망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.
 - 이러한 투자 트렌드를 악용하여 실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는 불공정거래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.
 - 특히,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&A세력 등 소위 ‘주가조작꾼’들이 빈번히 사용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교묘하고 치밀합니다.
 - 또한,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기업 대부분이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 정지*되는 등 투자자들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.
- * ‘23년중 금감원 조사 후 조치완료된 7건중 6건이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되었음
-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
 - ‘23년중 7건을 조치완료*하였으며,
- * 검찰 고발·통보 5건(증선위 의결), 검찰 이첩 2건(증선위원장 긴급조치)
- 현재 13건의 사건을 집중 조사 중에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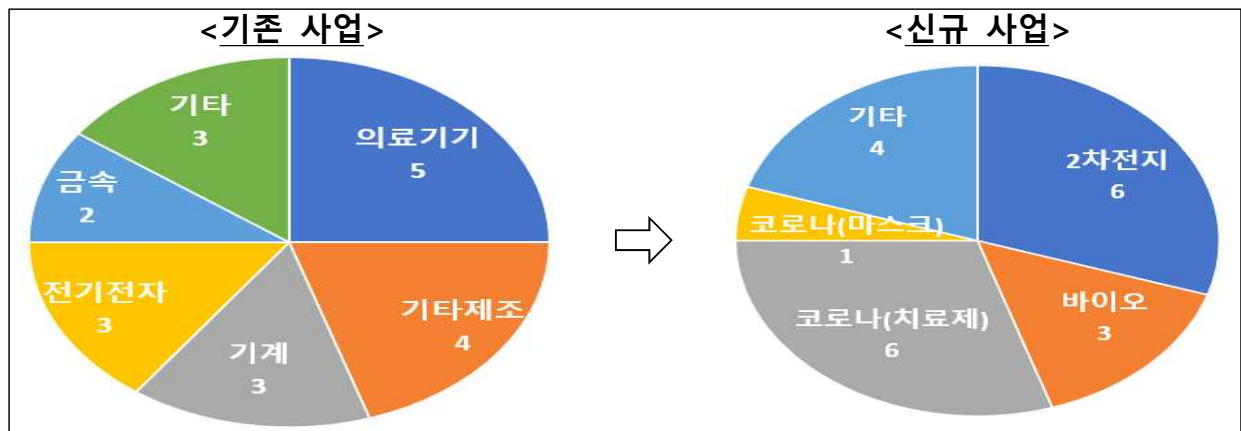
2

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기업의 특징

□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상 20건(조치완료 7건, 조사 중 13건)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.

❶ 기존에 영위중이던 사업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도 불공정거래의 소재로 사용하였습니다.

-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, 유통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2차 전지를 개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였습니다.



❷ 신규사업 테마는 관련주 급등시기에 따라 매년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

- '20년 이전에는 바이오 테마가, 코로나 팬데믹기간인 '20년~'21년 중에는 코로나19 관련 사업(마스크, 치료제 등)이, '22년 이후에는 2차 전지 사업이 불공정거래에 주로 활용되었습니다.

조사대상 신규산업 현황

(단위 : 건)

구분	20년 이전	'20~21년	'22~23년	합계
바이오	2(66.7%)	1	-	3
코로나	-	7(58.3%)	-	7
2차전지	-	1	5(62.5%)	6
기타(가상자산등)	1	-	3	4
합 계	3	9	8	20

③ 이러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&A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.

- 조치완료 7건중 3건(42.9%)은 무자본 M&A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(6개월內)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였으며,
- 조사중인 13건중 7건(53.8%)의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, 무자본 M&A세력의 연루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.

④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횡령·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
- 조치완료 7건중 3건(42.9%)의 조사과정에서 횡령·배임 혐의가 확인 되었으며 이중 1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의 유상 증자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.

⑤ 주로 코스닥 상장사社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었으며, 대부분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 되었습니다.

- 조사대상 20건중 18건(90.0%)이 코스닥 상장社와 관련된 사건이며, 20개사중 10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된 상태입니다.
- 특히 조치완료건의 경우 7건중 6건(85.7%)의 상장社가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 되었습니다.

신규사업 추진 기업의 특징

(단위 : 건, %)

구분	조치완료(7)	조사중(13)	합계(20)
최대주주 변경	3(42.9)	7(53.8)	10건(50.0)
자금조달(50억 이상)	5*(71.4)	10(76.9)	15건(75.0)
코스닥社	6(85.7)	12(92.3)	18건(90.0)
상폐·거래정지	6(85.7)	4(30.8)	10건(50.0)

* 횡령·배임 혐의가 확인된 3건은 수사 의뢰

유형1 신규사업과 관련한 허위의 대규모 자금조달**[사례] 신규사업을 가장한 자금조달**

-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허위의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한 후 계속 연기하거나, 사채 자금을 이용하여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후 신규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유용하기도 하였습니다.
- 또한 신규 유망사업 추진을 가장하여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횡령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.

☞ 신규사업 추진내역, 향후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✓ 정기보고서를 통해 조달자금의 사용내역, 신규사업의 세부 추진현황 또는 미추진 사유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유형2 전문가·유명인사 영입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위장

- 신규사업과 관련된 전문가(연구원 등), 유명인사를 사외이사 등으로 영입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
- 그러나 임원으로 선임된 전문가는 이사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등 경영 참여가 사실상 전무하거나, 관련 연구 조직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☞ 신규사업 관련 전문가·유명인사가 경영진에 선임되었다고 해서 실제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.



유형3 양해각서(MoU 등)를 정식 사업계약처럼 과장 홍보



- 신규사업과 연관된 국내·외 사업체 또는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을 보도자료, 인터뷰 등을 통해 과장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- 법적 이행의무가 없는 MoU는 상호 협력 수준의 선언문에 불과함에도 실제 본 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
 - 또한 공시의무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거나, MoU가 파기되더라도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투자자들이 사업의 실체나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

☞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MoU 등 체결은 신규사업 진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


유형4 실체가 없는 사업체에 대규모 투자

-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관련 사업체 또는 연구소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하였으나,
 - 해당 사업체나 연구기관은 이름만 신규사업과 관련이 있을 뿐(예 : 000 바이오, △△△HEALTHCARE 등), 해당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폐이퍼컴퍼니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.
- 또한, 종종 해외 법인이나 연구소가 이용되어 그 실체를 개인투자자들이 더욱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.

☞ 신규사업 진출 목적의 법인투자(인수 등) 시 해당 사업체의 실체성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- 금융감독원은 쏘조사국(조사1~3국)의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하고, 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겠습니다.
-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하여 집중 조사하는 한편,
-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·외 유관기관(식약처, 관세청 등)과의 협조 등을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조사하겠습니다.